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음 5월 13일) 제15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삼성의 새만금 투자 진실 규명과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또 다시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16일 도의회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삼성과 정부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투자 약속 지켜라”

한국노총전북본부-도경영자총협, 삼성·정부에 촉구 전북공무원노조연맹도 “투자 협약 진실 규명하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진실 규명과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또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노총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16일 도의회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삼성과 정부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두형진 의장(한국노총전북본부)과 김동철(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그룹과 전북도는 새만금에 2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MOU가 체결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투자는 진전이 없다. 특히 투자협약 이행 당사자들이 연출한 정치소리며 진상 규명과 책임추궁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삼성 MOU가 휴지조각으로 버려질지 얼마만큼의 투자가 진행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공방에 앞서 삼성 MOU 이행과 관련한 노력에 대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은 신뢰를 최선으로 여기는 기업의 이름을 걸고, 정부와 전북도는 도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삼성 투자에 대한 유종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전북도는 20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과 염원이 걸려 있음을 잊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삼성MOU 이행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새만금개발의 전기가 될 삼성의 투자이행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16일 새만금 신시전광대 앞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진실을 밝히라”고 비판

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해 시군 위원장 11명은 이날 “삼성 새만금 투자는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진실 규명과 후속대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맺은 MOU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삼성은 윤리적 책임에 비해 전북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MOU를 체결한 배경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LH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한데 따라 나 빠진 전북도민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산물임을 인정할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지사직을 걸겠다는 말로 삼성MOU를 자신했던 김원주 전 지사도 비난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면서 “민선 6기 도정도 언제까지 삼성의 공식입장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사해 밝히고 투자약속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매일 INDEX

3면 '20대 국회서 개헌문제 매듭 노력'

정세균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개헌문제 가 매듭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면 전북경찰, 잇따른 비위 혐위 구술수

전북경찰이 최근 며칠사이 잇따른 비위 신고가 접수돼 홍역을 앓고 있다.

13면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없다'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구 재단 서남대 의대 폐과 제출 대책 논의

남원시, 정치권·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책회의 “교육부장관에 구 재단의 학교 운영참여 배제 촉구할 것”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시의원 등 정치권, 서남대, 시민단체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서남대 사태발생배경과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과 서남대 측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에 이어 공동대책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동대책회의는 지난 6월7일 교육부에서 구 재단 측에서 서남대 정상화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됐다. 보도된 내용은 2018학년부터 서남대의과대학을 폐과하고 남원캠퍼스 일부는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하고 아산캠퍼스 체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한려대를 자진 폐쇄해 횡령금 330억원을 보전하고 녹십자병원,

남광병원, 남원병원 등 약 460억원 규모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으로 교육여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치인, 대학교 구성원, 시민대표 모두는 분개했다. 어떻게 교육부는 지난 2007년부터 12년까지 330억원이나 횡령과 비리 등으로 대학경영을 부실하게 하고 지역의 정서와 지역민들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구 재단 측에 다시 서남대의 운영을 맡기고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구 재단에서도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수는 있다고 해도 자체 자금 계획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리고 앞서 명지료재단이나, 예수병원의 자구안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완요구를 하면서 신속히 보도를 한 것은 중앙정부기관에서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 했다. 특히 서남대 구성원들은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간다면 서남대구성원은 물론 학부모,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교비횡령비리재단과 교육부 구조개혁팀들의 밀실실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대책은 정치권과 연계 교육부장관과 면담해 납원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교육부에 구 재단 측의 학교 운영참여를 배제하도록 촉구 하며 인사사회가 제출기한인 내년 2월 24일 이전에 반드시 정상화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서남대 측에서 추진하는 감사원 국민감사명 작업에 시민단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서남대는 서남대 특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날 제시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서남대 정상화에 정치권을 비롯 전 시민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더민주, '법인세 인상' 본격 재추진 박주민·윤호중 의원 '대기업 세율 25%로 인상' 법안 발의

20대 국회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공공연하게 시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법인세 인상을 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마저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김현미 신임 예결위원장은 한라디오방송에서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율 25%에서 22%로 낮았다. 그것을 최소한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 5년 동안에 25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일단 이것부터 정상화하고 시작하자”고 법인세 인상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매출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과 함께 여기에는

김현권, 우원식, 신경민, 안규백, 진선미, 이찬열, 서형수, 전재수, 신창현, 김영호 의원 등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것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세분화해 2억 초과 500억 이하 기업에는 22%의 법인세를, 500억 초과 기업에 한해서는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세 200억 초과 기업에 22%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을 근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 추계를 선정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는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연평균 4조5,0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역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윤 의원과 더불어 해당 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철승, 김종민, 김혜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모두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성주 기자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 서남대 의대 폐과 반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 결의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는 16일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제21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9면> 고창군의회의(의장 이상호) 주관으로 열린 이날 월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의회의장과 부의장, 박우정 고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발원업직접 지불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서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 건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주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건의안,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 촉구 건의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반대 건의안, 서남대 의대 폐과 및 남원캠퍼스 폐과 반대 건의안을 안건으로 삼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14개 시·군의 결집과 공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NAVER 장수물 - 검색 장수군
송이재령장 약용자연휴양림 물병배장